

폐비닐쓰레기 대란

환경당국 안이한 대처가 혼란 키워

최근 재활용업체들의 폐비닐류 수거 거부 사태로 축발된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은 환경부의 늑장 대처가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한몫 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금지 조치는 이미 지난해 7월에 예고된 시안이지만 환경당국은 지난 기간에 방지해왔다.

'오락가락' 재활용품 분리수거 규정도 혼란을 부추겼다.

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부는 지난해 7월 "연말부터 폐플라스틱, 분류되지 않은 폐지, 폐금속 폐방지원료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폐기물을 수입이 국내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지난해 말부터 중국으로 재활용 품 수출이 어려워졌다.

코트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

국에 5억 이상의 고체 폐기물을 수출해온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수출 길이 막혔다. 우리 재활용업체들도 PET파쇄풀, 폐플라스틱의 올해 1~2월 중국 수출량은 1774으로 전년 2만2097t 대비 92.0% 급감했다.

문제는 환경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환경부가 상황을 방지하고 있던 시기, 지난달 재활용업체들은 "4월

부터 폐비닐류 등의 수거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환경당국은 그럼에도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아 자체와 이파트단지 등에 혼란을 가

중시켰다.

결국 4월 들어 재활용쓰레기 수거 대란이 닥쳐자 그제서야 설득에 나서는 등 뒷북 대응으로 물의를 빚었다. 환경부 담당자는 물론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이날 업체들이 마음을 돌려 수거 정상화를 결정하고 나서야 재활용업체 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폐비닐·페스티로폼 처리 규정도 불분명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 가능지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

침' 등에 따르면 이들 폼목은 자자체장이 반드시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수거해야하는 폼목이다. 만약 자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예외 사항으로 '재활용을 위한 분리·선별, 세척 과정에서 이 물질 제거가 어려울 정도로 오염된 폐비닐' 등은 생산된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당국은 그럼에도 재활용업체들이 아파트 현장에서 폐비닐 등의 분리수거를 거부하는 사태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정 조치에 나서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난에 직면한 상태다.

뉴시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해 조업한 선장 검거

불법체류 외국인을 채용해 일을 시킨 선장과 외국인이 해경에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2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조업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9.77t급 연안통발 어선 선장 A(54)씨와 카자흐스탄 국적의 선원 B(35)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선장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께 전남 완도군 인근해상에서 외국인 선원 B씨 등 8명을 태우고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외국인 선원 B씨를 승선시켰음에도 승선원명부에는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는 지난해 9월 3개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돌아가지 않고 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B씨를 발견했으며 신병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

원도=김광수 기자

PC방 등지서 금품 훔친 20대 구속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일 PC방 등지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기경동 한 PC방에서 업주가 자리에 비운 텃을 털어 카운터에서 현금 52만 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충북과 서울 등지의 PC방, 미용실, 목욕탕에서 5차례에 걸쳐 449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훔친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불 터는 흉내 내다 11층서 60대 추락 사망

아파트에서 이불을 터는 흉내를 내던 60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A(65·여)씨가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집 안에 있던 A씨의 가족은 "A씨가 1시간 전에 이불을 털다가 떨어질 뻔 했더니 흉내를 내다 추락해 숨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방배초서 학생 인질극...인질범 검거

2일 서울 방배초등학교에 꾸현이 침입해 4학년 여학생을 인질로 잡아 경찰과 대치를 벌이다가 1시간여 만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7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1층에서 남성 A(25)씨가 침입해 이 학교 4학년 여학생의 목에 흉기를 댄 채 인질로 잡았다.

A씨는 졸업 증명서를 떼겠다며 학교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인질극을 벌이면서 "기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학교 보안관의 신고로 경찰특공대장 등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와 대화를 이어갔다. 대화 중 경찰에게 물을 받아 마시던 A씨가 간질 증상을 보이자 경찰은 오후 12시43분이 남성을 검거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피해 학생은 지인 관계가 아니었으며 A씨와 피해 학생 모두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생 위협 오토바이 빼앗은 20대 3명 입건

부산 동부경찰서는 2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고교생을 뒤쫓아가 둔기로 위협해 오토바이를 빼앗은 A(20)씨 등 3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7일 오후 8시 8분께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고교생 B(16)군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를 차량으로 가로막았다.

이어 A씨 등은 B군을 붙잡고 둔기로 위협하며 시가 2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영상 분석을 통해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승용차 차량번호를 확인해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검찰, 대부업체 상대 신용대출 사기단 적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모집한 뒤 미지 직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을 작성,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급여 거래 내역 명세표를 위조, 대부업체들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낸 혐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총책 A(41)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일선책 B(47·여) 씨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달아난 9명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했다.

A 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저신용 대출신청 명의자의 은행 급여 거래내역 명세표 등을 위조, 22개 대부업체를 속이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총 3억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희망자 알선한, 금융기관 명의의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위조책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했다. 또 대출명의자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 허위의 보증인을 내세우는가 하면 보증인 명의의 급여계좌 거래내역서까지도 위조해 대부업체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수개의 대부업체에 한꺼번에 대출신청을 해 돈을 받아내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주춘정 기자



텅 빈 축산 농가 농림축산식품부가 A형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을 9일까지로 7일간 연장한다고 밝힌 2일 오후 경기 안성 일죽면의 한 축산 농가가 텅 비어있다.

순천 K여고 교실서 17명 집단폭행 '말썽'

순천에서 여고생이 자율학습시간에 급우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말썽이 되고 있다.

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순천시 조례등 K여고 2학년 A양이 같은 학년 학생들 17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5시 10분 쯤 교실에서 둘이리 신입회원 선발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감정이 쌓여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승급처지 등이리 모임에 들어갈

려고 했던 B양은 회장인 A양이 회원 모집이 다 됐다며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면서도 다른 학생을 영입하는 모습에 격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학교측은 지난달 29일 5시간 20분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지만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려 다시 회의를 열어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적극 가담 학생들은 4명 정도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를 내릴것이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